



미 정치권, 재정절벽 해법에 대한 이견 지속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재정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양당 지도부와 협의를 하기로 한 가운데, 양당은 쟁점 사항인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에 대해 여전히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음.

- 2012년 12월 말 감세조치가 종료되고 재정지출이 삭감되는 재정절벽(fiscal cliff) 문제 현실화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16일 민주, 공화 양당의 지도부와 함께 해법을 협의하기로 함.
- 이번 협의의 핵심은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여부이며,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해 39.6%의 최고세율을 부활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으나, 공화당 측은 이에 반대하고 복지지출 삭감을 요구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.
- 하지만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는 경우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부유층 증세를 받아들이자는 여론이 생겨나고 있으며, 11월 15일 오바마 대통령도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39.6%보다 낮게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.

■ 11월 8일 미 의회예산국(CBO)은 부유층에 대한 증세가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오바마 대통령 측의 주장을 지지함.

- CBO는 감세조치가 전 소득구간에 대해 연장된다면 GDP가 1.5%p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, 고소득층이 감세조치 연장에서 제외되더라도 GDP가 1.25%p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해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나타남.
- 한편, CBO는 12월 31일까지 의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미국 경제가 재정절벽에 직면할 경우 GDP가 0.5% 감소하고 실업률이 9.1%까지 치솟으면서 2013년 미국경제는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함.

(Reuters 등, 11/8)